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최 승 은
법무관 공 보 영

I. 회의 개요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과제로,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 이하 ‘규범안」(Draft Provisions on the Use and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제62차 작업반 회의는 2021. 11. 22. ~ 26.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제63차 작업반 회의(2022. 4. 4. ~ 8.)를 앞두고 회기간 비공식회의(2022. 3. 1. ~ 2.)가 개최되었다.

2. 회의 결과 요지

이번 제62차 작업반 회의 및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는 규범안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특히 ① 정의 조항, ② 국경간 승인과 관련된 조항, ③ 조항간 표현의 통일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A/CN.9/WG.IV/WP.170, 이하 ‘초안’).

II. 주요 논의사항

1. 제1조 정의

① 초안 제1조 (c)호¹⁾에서 개인과 신원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의 명칭을 “electronic identification”과 “authentication”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in the context of IdM services, means a process used to achieve sufficient assurance in the binding between a person and an identity.

“authentication”을 지지하는 측은 “identification”은 인증대상 자체 또는 결과로서의 상태 개념이라면, “authentication”은 인증대상을 증명하는 과정의 개념이므로 “authentication”이 정의조항 설명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identification”을 지지하는 측은 “authentication”이 국가마다 달리 이해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채택되기 곤란하며, “identification”이 UNCITRAL 전자상거래 규범에도 사용되는데 통일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논의 끝에 “electronic identification”을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다른 조항에서 “electronic identification”을 사용하는 것이 문맥상 부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는 신원관리(Identity management)가 두 가지 단계로 이뤄져(two-stage) 있고, 초안 제1조(c)호의 “electronic identification”은 의미상 두 가지 단계 중 두 번째 단계²⁾인데, “electronic identification”가 일부 조항(초안 제5조³⁾

등)에서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electronic identification”의 대안으로 신원관리의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 “IdM service”, “online authentication”, “electronic verification”, “credential verification” 등이 제안되었고, 초안 제1조(c)호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

② 초안 제1조(g)⁴⁾호의 “IdM service provider”를 정의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초안 제6조에 규정된 서비스의 일부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항 문구 중 “a person that provides IdM services”를 “a person that provides any Idm service”로 수정하자는 사무국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초안이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초안 제6조에 규정된 서비스 일체를 제공함은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도했다는 이유로 제

2) 첫 번째 단계는 초안 제1조(i), “Identity proofing” means the process of collecting, verifying, and validating sufficient attributes to define and confirm the identity of a person within a particular context.

3) Article 5. Legal recognition of IdM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electronic identification**(두 가지 단계 모두를 의미함)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enforceability or admissibility as evidence on the sole ground that:

(a) The **identity proofing and electronic identification**(두 번째 단계를 의미함) are in electronic form;

or

(b) The IdM system is not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11.

4) Article 1. Definitions (g) “IdM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that provides IdM services;

안에 반대하였고, 최종적으로 “IdM service provider”와 “trust service provider”의 정의를 이용자(subscriber)들과 서비스 사용에 관한 ‘arrangement’를 한 자로 수정⁵⁾하여 이용자와 연계되도록 수정하였다.

한편, 작업반은 ‘arrangement’란 계약 체결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교섭 등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각종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을 밝혔다.

③ 초안 제1조 (j)호 문안에 “Relying Party”의 정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내용을 “a person that acts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IdM services or trust services”로 확정하였다.

2. 제2조 적용범위 및 제3조 자발적 사용

초안 제2조 제2항의 (b)호 및 (c)호⁶⁾는 특정 서비스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초안 제3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안의 위치를 제2조에서 초안 제3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다.⁷⁾

한편, 초안 제2조 제3항은 신원관리 외에 신뢰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안에 신뢰서비스를 추가⁸⁾하였다.

3.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초안 제6조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5) Article 1. Definitions (g)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means a person who enters into an arrangement for the provision of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with a subscriber;

6)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2. Nothing in this [instrument] requires:

(a)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b) **The use of a particular IdM service; or**

(c) **The use of a particular trust service.**

7) Article 3. Voluntary use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1. Nothing in this Law requires a person to use an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trust service or **to use a particular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trust service** without the person’s consent.

8)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3. Nothing in this Law affects a legal requirement that a person be identified **or that a trust service** be us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defined or prescribed by law

9) Article 6. Obligations of IdM service providers

An IdM service provider shall[, **at a minimum**]:

(a) Have in place operational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a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design of the IdM system, to address **[at a minimum]** requirements to:

제공자의 의무들은 최소한도로 규정된 것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문과 같은 조 (a)호에 “at a minimum” 문안을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같은 조 본문에 관해서는, 초안 제6조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들이 최소한의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았고, 같은 조 (a)호의 경우 ‘at a minimum’이 그 앞에 나오는 ‘a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design of the IdM system’과 서로 충돌될 의견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때의 ‘at a minimum’은 조직 규칙 등 최소한의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맥락에 관한 것이어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같은 조 본문과 (a)호 모두에 “at a minimum”을 추가하였다.

4. 제7조 정보 유출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초안 제7조 제1항¹⁰⁾ (c)호에 대해서만 규정 위반사실이나 피해를 통지를 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law”)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c)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같은 항 (a)호 및 (b)호의 경우에도 해당 문구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in accordance with the law”를 삽입하였다.

5. 제8조 가입자의 의무

가입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초안 제8조¹¹⁾와 관련하여 본 조가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0) Article 7. Obligations of IdM service providers in case of data breach

1. If a breach of security or loss of integrity occurs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dM system, including the attributes managed therein,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law]**:
 - (a)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contain the breach or los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suspending the affected service or revoking the affected identity credentials;
 - (b) Remedy the breach or loss; and
 - (c) Notify the breach or loss [in accordance with the law].

11) Article 8. Obligations of subscribers

- The subscriber shall notify the IdM service provider, by utilizing means made available by the IdM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rticle 6 or by otherwise using reasonable means, if:
- (a) The subscriber knows that the subscriber’s identity credentials have [or may have] been compromised; or
 - [(b) The circumstances known to the subscriber give rise to a substantial risk that the subscriber’s identity credentials may have been compromised.]

구체적으로 통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실무상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가입자가 정보의 유출 가능성(may have been compromised)을 인지한 경우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가입자가 위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문구를 해설서에 추가하자는 의견(the subscriber's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8 does not necessarily release the IdM service provider from liability.)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작업반은 초안 제8조 (a)호의 'or may have'는 삭제하고, 초안 제15조의 표현 중 초안 제8조 내용을 차용한 부분도 초안 제8조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6. 제9조¹²⁾ 신원관리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신원 인증

신원 인증에 특정한 목적(particular purpose)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당연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특정한 목적'이라는 표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또한, 신원관리 서비스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전자적 신원 인증을 위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a method is used for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는 부분과 관련하여, 본 규범의 핵심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신원 인증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방법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방법(reliable method)"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대안^①)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reliable method"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신원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요건을 규정한 초안 제10조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안(in accordance with article 10)를 추가하자는 견해(대안^②)가 있었으나, 작업반은 초안 제9조는 기능적 등가성에 관한 여러 조문들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는 대안^①에

12) Article 9. Identification of a person using IdM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where the law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for a particular purpose],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IdM services if a method is used for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for that purpose].

더하여 초안 제9조와 관련이 있는 초안 제10조 제1항 (b)호에 ‘reliable’를 추가하자는 의견¹³⁾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같은 조는 신원 관리 서비스의 법적 효력 인정을 위한 안전조항(safety clause)으로서 신뢰성(reliable)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 ‘deemed’ 나 ‘if’ 등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초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7. 제10조 신원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사무국은 초안의 상당수 조항에서 IdM service라고 표현하는 반면 초안 제10조와 초안 제11조에서는 IdM system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한 표현으로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대표단은 초안 제10조와 제11조가 ‘IdM service’의 신뢰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IdM service’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작업반은 초안 제10조와 초안 제11조의 명칭을 ‘IdM serv-

ice’로 통일하였다.

신뢰성 판단의 기준을 규정한 초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같은 항 (b)호의 “level of assurance framework”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해설서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trust framework”라는 광의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국내적으로 정의될 개념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작업반은 같은 항의 “level of assurance framework”는 유지하되, “levels of assurance or similar frameworks providing guidelines to designate the degree of confidence in IdM systems”는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8. 제11조 신뢰할 수 있는 신원관리 서비스의 지정

신뢰할 수 있는 신원관리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할 것을 규정한 초안 제11조 제2항 (b)호¹⁴⁾에 관하

13) Article 10. Reliability requirements for IdM [services][systems]

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9, the method shall be:

(b) **deemed to be reliable if the method has been**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 described in article 9.

14) Article 11. Designation of reliable IdM systems [services]

2. The [person, organ or authority, whether public or private,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competent] shall:

(b) **Publish a list of designated IdM systems** [services], including details of the IdM service provider[, or

여 해당 목록이 가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목록 작성과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방법으

로 대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호의 “or otherwise inform the public”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9. 제12조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변경 전 초안 제12조	변경 후 제12조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due to a failur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1.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be liable for loss caused <u>to the subscriber or to the relying party</u> due to a failure to comply with its <u>obligations under articles 6 and 7</u> .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liability under the law and is without prejudice to: (a) any other basis of liability under the law, including lia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or (b) any other legal consequences under [this instrument] of a failure of the IdM service provider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is instrument].	2.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liability under the law and is without prejudice to: (a) any other basis of liability under the law, including lia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ntractual obligations; or (b) any other legal consequences of a failure of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this Law</u> .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M system to the extent that: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IdM system may be used; [(b) Those limitations are agreed between the IdM service provider and the subscrib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a subscriber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u>identity management service</u> to the extent that: (a) 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u>identity management service is</u> used; and (b) Those limitations are <u>contained in the arrangement</u> between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and the subscriber.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M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to the subscriber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M system to the extent that: (c) The IdM service provider has notified [informed] the subscriber of those limit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4. [신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u>to a relying party</u> for loss arising from the use of an identity management service to the extent that: (a) <u>That use exceeds th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r value of the transaction for which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is used; and</u> (b) <u>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has complied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6, subparagraph (e) with respect to that transaction.</u>

otherwise inform the public]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제한’을 다룬 초안 제12조는 초안의 핵심 조항으로서 많은 논의와 변화가 있었다. 같은 조의 목적은 계약의 존재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자가 초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서비스 공급의 성격(public or private)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이번 제62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i) 책임의 상대방으로 가입자와 신뢰당사자를 구분하고, (i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초안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책임의 상대방을 가입자(subscriber) 또는 신뢰 당사자(relying party)로 구체화했고, 초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은 초안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신뢰 당사자에 대한 책임 제한은 같은 조 제4항으로 분리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사이에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을 시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된다는 초안 제12조 제3항 (b)호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하는 용어(‘agree’)에 대해 가입자의 서비스 사용이 법 규정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의견에 따라 “arrangement”로 수정하였다. 또한, 그러한 합의가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뢰 당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므로 동 호에 신뢰 당사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신뢰 당사자에 대한 책임 제한을 새롭게 규정한 같은 조 제4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초안 제12조 제4항 (b)호와 관련하여 신뢰 당사자에 대한 책임의 한도가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책임 제한의 정도와 유사하도록 수정(‘subscriber concerned’)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초안 제6조 (e)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변경 전 초안 제6조 (e)항	제6조 (e)항
(e) Provide and make publicly available means by which a subscriber may notify the IdM service provider of a security breach pursuant to article 8.	(e) Provide easily accessible means that enable a relying party to ascertain, where relevant: (i) Any limitation on the purpose or value for which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may be used; and (ii) Any limitation on the scope or extent of liability stipulated by the ident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한편,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 초안 제6조 (e)항과 같은 조 (d)항¹⁵⁾이 유사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째로, 같은 조 (e)항의 ‘신뢰 당사자(relying party)’와 같은 조 (d)항의 ‘제3자(third party)’ 양자를 구분해야 되는지 관하여 ‘제3자’를 ‘신뢰당사자’로 통일하자는 견해, ‘제3자’를 그대로 두고, ‘신뢰당사자’를 추가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로, 같은 조 (e)항의 ‘easily’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easily’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 (e)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10. 제14조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초안 제14조 제1항¹⁶⁾에도 초안 제6조 (a)

항의 “신뢰서비스의 목적과 설계(purpose and design of the trust service)”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규범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초안 제14조 제1항 (a)호에서 “기능(functions)”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최소한(at a minimum)”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c)호의 “in accordance with law”는 (c)호 뿐만 아니라 같은 항의 (a)호 및 (b)호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c)호에서 삭제하고, 같은 항 본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11. 제15조¹⁷⁾ 가입자의 의무

본조 (a)항 중 “subscriber’s credentials”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IdM 서비스의 맥락에서 “identity credentials”라는 표현을 사용

15) Article 6. Obligations of IdM service providers

An IdM service provider shall[, at a minimum]:

- (d) Make its operational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easily** accessible to subscribers and **third parties**

16) Article 14. Obligations of trust service providers

- 1. A trust service provider shall, at a minimum:

- (a) Have in place operational rules, policies and practices, including a plan to ensure continuity in case of termination of activity, a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design of the trust service;

17) Article 15. Obligations of subscribers

The subscriber shall notify the trust service provider, by utilizing means made available by the trust service provider pursuant to article 14, paragraph 1 or by otherwise using reasonable means, if:

- (a) The subscriber knows that **data or means used by the subscriber for access and usage of** the trust service has been compromised; or
- (b) The circumstances known to the subscriber give rise to a substantial risk that the trust service may have been compromised.

하고 있고, 신뢰서비스의 맥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반은 같은 항 문안 중 “the trust service” 앞부분에 “the data or means used by the subscriber for access and usage of”를 추가하였다.

12. 제16조¹⁸⁾ 전자 서명

본조와 관련하여 전자서명은 신분(identity)을 나타내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신분은 아니므로 초안 제16조 (a)항의 “identify”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identify”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에서 확립된 개념이라는 사무국의 설명을 고려하여 현안대로 유지되었다.

13. 제17조¹⁹⁾ 전자 봉인

본조 (b)호에 “and date”를 유지할지에 관하여, “time”이라는 개념에는 “date”도 포

함되어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초안 전반에서 “time and date”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4. 제22조 신뢰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본조 제1항 (a)호의 “목적(purpose)”란 용어와 통일성을 위해 본조 제2항 (h)호의 “기능(function)”은 “목적(purpose)”로 수정되었고, 초안 제22조 제2항 (c)호로 ‘Any relevant level of reliability of the method used’가 추가되었다.

15. 제25조 국경간 상호인증

본조 제1항 중 국경간 상호인증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신뢰성의 인정 요건을 극복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동등(a substantially equivalent)’과 ‘최소한 동등(at least an equivalent)’ 중 무엇으로 할

18) Article 16. Electronic signatures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method is used:

- (a) To **identify** the person; and
- (b) To indicate the person’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19) Article 17. Electronic seals

Where the law requires a legal person to affix a seal,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eal,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 data message if a method is used:

- (a) To provide reliable assurance of the origin of the data message; and
- (b) To detect any alteration to the data message after **the time and date** of affixation,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endorsement and any change that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지에 관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판단 재량의 여지를 두기 위해 전자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었으나, 전자는 모델법 이외에 별도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수가 후자를 지지하여 후자가 채택되었다. 또한, 신원관리 서비스와 신뢰서비스를 구별하여 신뢰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상호인증을 초안 제26조²⁰⁾로 분리하였다.

16. 제22조와 제25조의 관계

초안 제22조 제3항²¹⁾은 신뢰서비스의 신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리적 요건 (geographic location)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초안 제25조의 국경간 상호인증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초안 제25조 제1항을 “meet the standard for reliability in article 22”로 수정하여 제22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초안 제25조가 규범의 핵심에 해당하는 조항임을 이유로 수정에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여서 원안이 유지되었다.

또한, 국경간 상호인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안 제22조 제2항에 “any relevant level of reliability of the method used”를 삽입하자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회기간 비공식회의에서 같은 항 (c)호가 추가되었다.

추가로 일부 국가들은 초안 제25조에 ‘with respect to article 22’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경간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문안에서 가정법(if)을

20) Article 26. Cross-border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the use of trust services

1. The result deriving from the use of a trust service provided outside [the enacting jurisdiction]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the result deriving from the use of a trust service provided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if the method used by the trust service offers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2. In determining whether a trust service offers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rust service shall be presumed to offer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if [the person, organ or authority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23] has determined that equivalence, taking into account article 22, paragraph 2.

21) Article 22. Reliability requirements for trust services

3. In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no regard shall be had:
 - (a) To the geographic location where the trust service is provided; or
 - (b) T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trust service provider.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초안 규정상 ‘최소한으로 동등한 신뢰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수범자인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 관할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가정법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II. 평가 및 시사점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은 제63차 작업반 회의(2022.4.4. ~ 4.8.)를 끝으로 제55차 본회의(Commission)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대한 논의는 2019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초안 내 각 조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63차 회의에서는 조항 간 표현의 통일, 해석의 명확성 등 전체 조항을 검토하는 마지막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안은 EU 회원국이 제시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계약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식 모델을 절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관련 법령(전자서명법 등)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만, 초안이 모델 법으로 성안되어 국내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제63차 작업반 회의에서

는 국내 수용시 상충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63차 회의에서 다음 주제로 ‘계약에서의 AI를 활용한 자동화(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 contracting)’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차기 주제의 논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 대상을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자동화(automation)로 한정하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논의 주제에서 제외되었다. 스마트 계약은 분산원장 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서 AI를 이용한 자동화 계약 담론에 포함시키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둘째,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AI와 관련된 논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AI(AI in trade)의 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뤘었는데, 실무작업반은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를 위한 AI(AI to trade), 즉 AI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논의에 집중한다.

한편, 구체적인 조항(provision)으로 ① AI를 이용한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legal recognition)받기 위한 요건 및 계약의 효과

에 관한 귀속(attribution), ② 계약의 성립 전 관련 정보(precontractual information)의 공개, 계약의 이행 등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of actions), ③ 채무불이행 발생시 책임의 귀속 주체, 배상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위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수용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일부

조항²²⁾을 두고 있으나, 동 법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초점을 맞춰 제정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관련 국내 논의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 실무작업반 논의는 국내법 정비에 참고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행 국제 UNCITRAL 규범²³⁾, 각국의 입법례²⁴⁾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송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 원칙을 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제13조 및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교신 수단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제12조(자동 메시지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된 계약에 대한 유효성 인정) 등.

24)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S.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전자 에이전트(electronic agent)’ 정의 규정(제2조 제6항), 전자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 성립 요건 관련 조항(제14조 제1항) 등.